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13.(금) 06:00 < 10.13.(금) 석간 > 배포 2023. 10. 12.(목)

「202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열려

- 디지털경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무역구제정책 운영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0월 13일(금)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디지털시대 무역구제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서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다양한 대응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 올해로 21회를 맞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는 WTO를 비롯한 호주, 영국, 중국, 인도 등 10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전문가, 기업인 등 110여 명 참석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은 수년 내에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제조치가 지나친 국내시장 보호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무역구제기관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국제포럼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의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22년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분쟁 615건 중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이 55%이며, 앞으로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역할 부재 보완책으로 개방적 복수국가 간 협정(Open Plurilateral Agreement, OPA)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자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담당 부서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진수 (044-203-5850)
		담당자	사무관	백숙자 (044-203-58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202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요

□ **(개최 배경)** 무역구제제도 발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무역구제분야 **정보 공유, 현안,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場)**

* 선진제도 도입을 위해 '89년 세미나로 시작, '01년부터 국제포럼으로 발전(올해 21회)

○ **對韓수입규제기관과 국내기업인** 간 **소통을 위한 계기**로도 활용

* 네트워킹 오찬(무역협회 주관, 피소 국내기업인 추가 참석), 양자면담 등

□ **(일시/장소)** '23.10.12(목)~14(토), COEX(아셈볼룸 201~203호)

□ **(참석)**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재민 무역위 위원장,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등 국내외 무역구제기관 관계자* 110여명

* WTO, 호주, 영국, 중국, 인도 등 對韓 수입규제기관 10개국 22명 참석 ☞ 붙임2 참조

□ **(포럼 주제)** 「디지털시대의 무역구제정책 : 도전과 과제」
(Trade Remedy Policies in the Digital Transition Era : Challenges and Tasks Ahead)

□ 세부 일정

시간		프로그램		
10.12(목)	17:30~19:30	**환영 만찬**		**삼청각**
10.13(금)	09:15~09:30	본포럼	**환담**	201호
	09:30~09:50		**개회식** • 개회사(3') : **이재민** (무역위 위원장) • 축 사(3') : **장영진** (산업부 1차관) • 기념 촬영	**COEX** 아셈볼룸 202~203호
	10:00~10:20		**기조연설 :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	
	10:20~12:00		**Session I : 국제 교역환경 변화가 무역구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좌 장 :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 • 발표/토론(5개국) : 무역구제기관 대표	
	12:00~14:00		**네트워킹 오찬** (무역협회 주관)	201호
	14:00~16:00		**Session II : 각국 무역구제제도 운영 경험과 사례** • 좌 장 : 조영진 무역위원회 위원 • 발표/토론(7개국) : 무역구제기관 대표	202~203호
	18:00~20:00	**18:00~19:30** **기관장 간담회**	**18:00~20:00** **조사관 기술협의회**	**인터컨H** 비너스/머큐리

* 본포럼(10.13日)은 한-영 동시통역 제공 / 양자면담: 10.13日 16:20~16:50(한-중)

참고2 「202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진행계획

시간		프로그램	
10.12(목)	17:30~19:30	**환영 만찬 (삼청각)**	
10.13(금)	09:15~09:30	본포럼	**사전환담 (행사VIP 23명)**
	09:30~09:50		**개회식** • 오프닝영상(2') 및 참석자 소개(행사VIP 15명) • 개회사(3') : 이재민 무역위 위원장 • **축 사(3') : 장영진** 산업부 1차관 • **기념촬영(10')** : 행사 VIP (23명)
	09:50~10:00		휴 식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 상영(5')
	10:00~10:20		**기조연설(15') :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
	10:20~12:00		**Session I : 국제교역환경 변화가 무역구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 좌 장 :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 • 발표/토론(5국) ① Andrea Mastromatteo(WTO 규범국 자문관) ② Donna Gultom(인니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③ Tetsuro Sone(일본 경산성 통상경제협력과장) ④ Trung Thang Chu(베트남 무역구제청 부청장) ⑤ Mahfoodh Alraqqadi(GCC 무역구제사무국 과장)
	12:00~14:00		**네트워킹 오찬** (무역협회 주관)
	14:00~16:00		**Session II : 각국의 무역구제 제도운영의 경험과 사례** • 좌 장 : **조영진 무역위원회 위원** • 발표/토론(7국) ① Bradley Armstrong(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② Zhenfu Wang (중국 상무부 부국장) ③ Satish Kumar (인도 상무부 심의관) ④ Khizar Hayat(파키스탄 관세위원회 국장) ⑤ Oliver Griffiths(영국 무역구제청 청장) ⑥ Eungkil Jeon(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⑦ Jaeyung Park(한국 무역위원회 실장)
	16:00~18:00	휴 식 * 16:20~16:50 한-중 양자면담(통상교섭실)	
	18:00~20:00	18:00~19:30 **기관장 간담회**	18:00~20:00 **조사관 기술협의회**

참고3 **한국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 현황** ('23.8월 기준)

◇ '23.8.31.까지 반덤핑 197건, 세이프가드 34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400건 조사신청, 각각 145건, 22건, 142건 조치

□ **〔반덤핑〕** '87.7.~'23.8월까지 총 197건(품목 기준)의 조사신청이 있었고, 이 중 145건(73.6%)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 제품별로는 **화학**(66건), 종이·목재(38건), 제철·금속(29건), 기계·전자(20건) 분야에 집중, 국가별로는 중국(99건), 일본(57건), EU(34건), 미국(30건) 順

○ 현재, **23개 품목(42개국)**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중**이며, **7개 품목(9개국)**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

□ **〔세이프가드〕** '87.7.~'23.8월까지 **총 34건**(품목 기준)의 **제소**가 있었고, 이 중 **22건**(64.7%)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 '94년 이전에 25건(74%), WTO 출범('95) 이후에 9건(26%)이 제소

○ 농·수산물이 19건(55.8%)으로 가장 많고, 기계·화학제품 順

□ **〔불공정무역행위〕** '87.7.~'23.8월까지 **총 400건**의 **조사신청**이 있었고, 이 중 **142건**(35.5%)에 대하여 수입·제조 금지 등 **제재조치**

○ **유형별**로는 **지재권 침해**(257건, 64.3%), 원산지 표시위반(76건, 19.0%), 수출입 계약위반 등(65건, 16.3%) 順

○ 현재, **8건**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